

與野,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촉구... 연금개혁 문구 추후 논의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 진전 기대
박형수 “여야 함께 추경안 제출” 요청
연금개혁,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연금개혁 문구 연금특위서 논의 예정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정부에 이번달까지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 관련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주요 의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1년 넘게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민주당에 43%로 양보한다고 해서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며 “몇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

혀 나가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질타가 있었다”며 “3월 중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엔 이견은 없었다. 국민연금·군복무·출산 크레딧, 저

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여야는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군 복무기간 전제로 확대하거나,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21대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굳이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대6대1 이었고 국민에게 커다란 연금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제 와서 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정하

기로 합의했다. 그 자체가 합의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되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수사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빌미를 여당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 부분을 문구로 넣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목록 지정을 정부 외교 실책이라고 주장하며 21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20일 본회의에선 삼부토건 추가조작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 주목... 과거 盧·朴 불참

현재, 선고일 통지 후 출석 여부 결정 예정
尹, 변론에 직접 출석한 첫 대통령
8차례 변론 참석, 선고일 출석 가능성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일에도 현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못했으며, 현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

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차례의 변론이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선고 당일도 청와대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현재에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직접 1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8일 석방으로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때문에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데 제약은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현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심판정 밖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선고 당일엔 현재 인근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고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

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황이기도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현재 주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의 선고기일 통지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히, 선고일이 확정되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예진 기자 syj@

의료인력수급추계위법 상임위 문턱 넘어

복지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처리
추계위, 의대 정원 심의 등 역할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 심사를 받게 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본회의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및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게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복지부·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을 마련했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임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급추계센터가 추계위의 추계 작업을 지원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입장을 펴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며 의협 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박태홍 기자

“부동산 시장, 철저한 점검 신속한 대응 필요”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 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